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I. 최근의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1.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

- ▶ 대외경제 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 주요 선진국 경제는 주가 상승,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 일본은 2.5조엔 규모의 추경편성, 미국은 3,500억 달러의 감세
 - * 미국은 01년 이후 13차례, EU는 금년 2차례 금리인하
 - 유가는 이라크의 수출재개 등으로 안정되면서 24.26\$/b 수준을 유지하고 반도체 가격도 점차 회복될 전망
 - * 03.5.6 美에너지정보청, 美에너지안보연 등 : 24.26\$/b
 - * 세계 반도체매출(IDC 전망) : (02)△2.3% → (03)2.3%
- ▶ 국내경제 여건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출은 사스 진정,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호조세가 유지되겠으나 증가율은 낮아질 것임.
 - 소비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가계대출 부담이 남아있어 회복세는 완만할 것임.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 지출확대에 따라 토목건설은 증가할 것이나,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에 따라 건물건설은 위축되어 전반적으로는 상반기 보다 증가세는 둔화 예상
 - 설비투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세계 지원 등 투자여건은 양호하므로 기업심리가 안정되면 회복될 가능성
- ▶ 하반기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금년전체로는 3%대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경기추세상 2/4분기가 저점이 될 전망이지만 3/4분기 이후 회복속도는 아직 불투명

-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고용감소,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 등이 가중될 우려
- 신용불량자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투자부진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
- * 취업자수(천명) : (02.5) 22,455 → (03.5)

22,370 : Δ85

- ▶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펴나겠습니다.
- 특히 투자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중요

①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설비투자 증가가 미흡한 상황

< 1인당 국민소득 : 1만 달러 → 2만 달러 기간중(한국은 95.02년) 성장비교 >

연평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한국
경제성장률	3.2	2.4	2.3	3.4	9.3	5.5
설비투자증가율	4.8	4.5	4.1	8.8	10.8	3.1

② 외국인 직접투자도 9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

(신고기준)	98	99	00	01	02	03.1/4	2/4
.FDI(억불)	88.5	155.4	152.2	112.9	91.0	11.1	15.5
(전년대비증감)	(27.0)	(75.6)	(Δ2.1)	(Δ25.8)	(Δ19.4)	(Δ48.4)	(Δ41.1)

2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 ▶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는 하나 지나친 위기 의식을 가질 이유는 없으며, 경제회복의 바탕이 될 대내외 경제여건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 긴밀한 대외관계가 구축되어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 완화
- * 외평채 가산금리(bp) : (02말)113 → (3.12)197 → (7.10)83
- 물가, 부동산시장, 국제수지 등이 안정되고 있고 경기선행적인 주가도 상승하는 등 경제회복의 기대감 형성

- SK 글로벌, 카드사 등 금융불안 요인도 원만히 해결
- 우려되던 노사분규도 진정되고 있어 사회안정은 물론 위축된 기업투자 심리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
- ▶ 각 경제주체들이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각자의 소임을 다해 나간다면 조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대응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내다보는 성장기반을 구축

-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생산성을 향상
- 근로자는 집단적 행동과 생산성 향상 범위를 넘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3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향

◆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회복을 뒷받침 - 이를 위하여 재정·금융·세제지원과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 * 국제기구와 외국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물가불안도 없으므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권고
- 중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고 카드채 문제 등 금융시장의 현안과제에 적극 대처
-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DDA·FTA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소득 2만달러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 참여정부 5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5대 전략 : 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개혁,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 특히,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

II.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1) 추경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 ▶ 추경예산을 금년 하반기중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 ▶ 송배전 설비(한전) 등 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소요 재원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재정(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금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지원

* 주요 사업 : 수자원 개발, 산업단지 공사, 영산강 대단위 개발 등

(2) 기업투자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 금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10→15%) 하여 투자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하겠습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대기업) 등 R&D 관련경비 세액공제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를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실천 과제	1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2 자금흐름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	3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4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주요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관련세제 지원강화(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15%로 확대 등) · 추경(4조 5천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한전 등 5천억원 규모) 확대 ·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SOC전용펀드 활성화 등)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외국기업 임직원 근로세제개선, 입지제도 개선 등) ·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지방 이전 지원 확대(세제·금융지원) · 중소·벤처기업 및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중시 수요기반확충 장기주식투자 상품 개발, 장기국채비중확대)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 금융현안의 조속한 마무리(카드사의 자금계획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고령자 고용 지원 강화) ·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추가 선정 등) ·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서민주거생활안정 지원(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FTA에 적극 대응(다수국가와동시에 FTA추진) · 농어업구조조정과 수출 촉진(고령·영세농의 경영이양 촉진) · 남북경협의 지속적추진(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 대통령 방미·방일·방중 후속조치 추진

▶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7.12일부터 적용).

(단위 : %)

품 목	개정전	개정후
· 승용자동차	7, 10, 14	5, 10
· PDP TV	10(1)	8(0.8)
· 프로젝션 TV	10	8
· 에어컨	20	16

* ()내는 잠정 세율

(3)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다국적 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게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과세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총급여액에 일정률(예 : 18%)을 적용하여 과세 종결

* 홍콩(단일 세율) 15%, 싱가포르(평균실효세율, 연급여 3억원기준) 17%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단순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겠습니다.

○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별로 상이한 세제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추진

* 경남(진사), 충북(오창) 등이 추가·신규 지정을 희망

○ 관세자유지역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 부산감천항 배후부지(4만평),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

▶ 교육·외환제도·출입국절차 등 외국인 경영 생활 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3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

○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호거래 절차를 간소화(현 한국은행 신고 → 거래은행 신고로 대체)

▶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고, 투자유치 실적을 부처별 업무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부처간 유치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12 → 10%로 인하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 등 지원 확대(2조원 규모)

▶ 「창업활성화 종합계획」·「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수립,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정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을 완화
- 합병관련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 세부담 완화
-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M&A펀드(1천억원) 조성

(5)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등 선박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
- 해운사가 선박투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 선박투자회사의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자회사(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6)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 ▶ SOC 투자 촉진을 위해 효율적인 민간사업 기법을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젝트 금융회사법」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종합개발 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유인 장치를 마련
- SOC 간접투자수단인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 강구
- 내년도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늘려 기존 SOC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자체 전용펀드 설립도 추진

- ▶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대형 사업을 적정 규모 단위사업으로 분할하여 경쟁 촉진
-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한 총사업비 심사 강화

(7)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외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 수도권의 공장난립을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전체 공장건축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 지방이전시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현재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산은이 저리자금 공급(3천억원)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 실시
- ▶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 종업원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분담하겠습니다.
-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화

▶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8)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 보전산지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10.1일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은 보전산지 내 입지제한

* 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폐수배출량이 1일 50m³이상인 사업장

○ 병원·사회복지시설·농어촌휴양시설(현재 1만m²까지만 허용) 등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m²이상도 설치 허용

▶ 휴양림 면적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림휴식년제, 산림휴양타당성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 금융시장 안정과 자금흐름 개선

(1)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

▶ 증시의 중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주가하락시 손실을 줄여주는 장기주식투자 상품 개발

○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개발(2003.7) 하고 배당 횟수도 확대(현행 연간 최대 2회)

○ 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

○ 확정금리부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식 등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지원은 지속 확대

▶ 연기금의 자산운용체계가 전문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상설운용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기타 연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외부 위탁비율을 확대

▶ 국채 발행물량과 만기 10년물의 비중(20% → 30%)을 확대하여 장기채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향후 국채전환 : 공적자금(49조원), 외평채(24.6조원) 등

▶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운영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수요를 흡수하고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최저 자본금 설립요건 인하(500억원 → 300억원), 투자범위 확대 등 설립

*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

(2)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 1개기관 채무자	개발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다중채무자중 금융기관 지원가능자	개인워크아웃제도, 민간주도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 금융기관차원 지원 곤란 (무소득, 변제능력 상실자 등)	법원(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대상채권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연계하여 운용 추진

▶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인프라(credit bureau)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3) 금융현안의 조속한 마무리

▶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 회계제도개혁 3개법안,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카드는 법과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우리금융 등의 은행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공개경쟁 매각 등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에 노력

○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 계획도 착실히 추진

3.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전업종)과 인원(인턴 취업 9천명 → 1만 3천명)을 확대

○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 사업장)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 5%p 인상(45 → 50%)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 10%p확대(45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10만원 상향조정(40 → 50만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20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 자활사업참가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하겠습니다.

○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 기 발표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올정 기국회때 법안 제출)

▶ 저부담-고급여의 국민연금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제정 추진(2002.10.24 국회제출, 20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상정)
 -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억 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20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매년 3%p 씩 보유세 과표현실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세율을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 DDA협상은 제5차 WTO각료회의(9월, 멕시코 칸쿤) 등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분야별 목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 ▶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선언을 추진
- ▶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영세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이양된 농지가 젊고 유능한 전업농에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검토
 - 논 편입비율(60% 미만) 폐지 등 농공단지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 추진
 - 어업별 조업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
- ▶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 ▶ 방미·방일·방중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訪美시 투자·수출상담(5건, 약 18억 달러 규모) 실현노력 강화
 - * 對美투자유치 사절단 파견(209.10월, 산자부·무역협회 공동)
 - 부품소재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일본과의 사회보장협정 연내 타결 추진, 김포-하네다 운항 등 대일 협력기반 강화

4.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중국과의 검사·검역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고 한중투자보장협정 개정 추진

*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연평균 5%의 실질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0년경 2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Ⅲ.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기반구축

- ◆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혁신과 경쟁축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경제 추구
 - 세계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
 - 또한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부담을 함께 나누는 행태의 전환도 필요
- ◆ 2만불 달성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을 토대로 참여정부 임기중 2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혁신) 과학기술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
 - (구조개혁)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노사개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정립
 - (동북아 경제중심) 동북아 협력과 비즈니스의 거점화
 - (국가균형발전) 지방을 혁신과 발전의 주체로 육성
- ◆ 이러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1. 기술혁신

- ▶ IT(정보), BT(바이오), NT(신소재), ET(환경), MT(해양) 등 신기술과 융합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 결정(7월말)
 -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 마련
 -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 ▶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 → 3년10개월)
 -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
 -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2. 구조개혁

-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하겠습니다.
 - 시장의 투명성·경쟁도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증장기 국가비전의 달성전략

질적 성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경제 실현

국정 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정 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참여정부 : 2만 달러시대 기반구축

5대 실천전략

성장동력의 확충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1 기술혁신

- 과학기술 발전
- 성장동력 육성

2 동북아
경제중심

- 비즈니스 거점
- 동북아 협력 강화

3 국가균형
발전

- 지방을 혁신,
발전의 주체로
육성

4 구조개혁

- 글로벌
스탠다드
- 투명성,
건전성 제고

5 노사개혁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인식과 행동의 전환

- 세계화의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
-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성과 분만 아니라 부담도 함께 공유

-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발생에 사전 대응하겠습니다.

-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0월말) 하고, 부실징후기업(71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 운용계획(2004·2006년)을 마련하고, 성과 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 국가채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되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하겠습니다.

-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20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

- ▶ 발전자회사 민영화, 철도시설 공단 출범 등 공기업 민영화·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 노사개혁

- ▶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 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하겠습니다.

-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4. 동북아 경제중심

-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 동북아 기획단(7.1 발족)이 물류·금융분야 등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 (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첨단지식산업 등의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 개발프로그램 추진
 -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2003년 성장전망

▶ 투자부진, 노사분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년 3%의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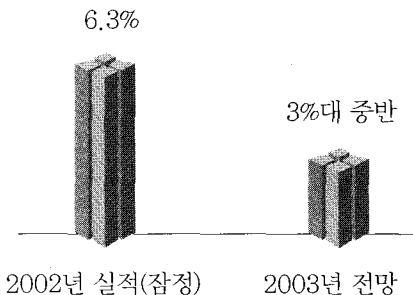
5. 국가균형발전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하겠습니다.
-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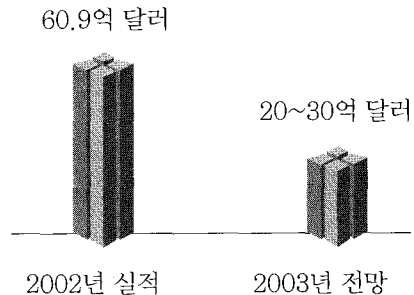
▶ 그러나 경제사회 전반이 안정되고 하반기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연간 3%중반 수준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경상수지도 지난해보다 흑자폭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98년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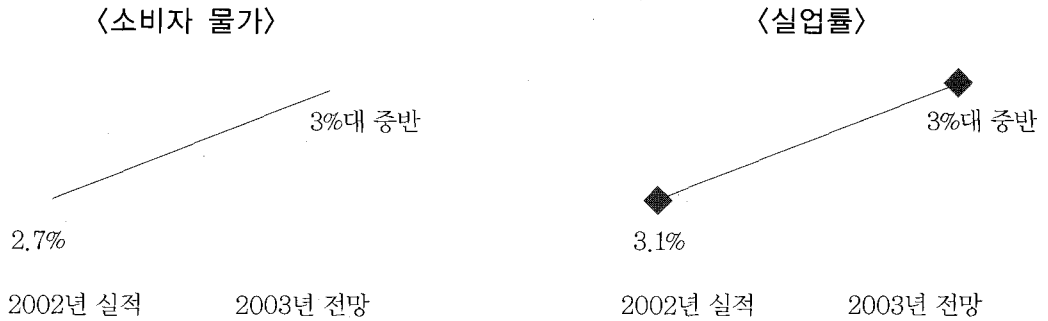
〈GDP성장률〉



〈경상수지〉



○ 소비자물가와 실업률도 연평균 3%대 중반
에서 안정 



2003년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제공 • 한국금융연구원

1.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03년 하반기중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로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반면 일본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경제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제거된 데다, 미국정부 및 FRB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일 것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는 수출의 회복여부에 달려 있으나, 당분간 수출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3년 하반기중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유로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ECB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높

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재정건전화협약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억제로 경기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상반기중 사스(SARS)로 인한 소비 및 투자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당초 예상하였던 GDP성장률 7.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03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상반기보다 회복세를 보여 GDP 성장률이 3/4분기 3.1%, 4/4분기 4.5%, 연평균 3.4%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회복 전망은 상반기중 소비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각종 경제외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함.

- 만일 상반기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현상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경제는 극도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2% 중반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상반기 3.8%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중 경기부진 및 작년 하반기 대비 유가 및 환율하락 추세, 그리고 세계적인 물가안정기조의 영향 등에 힘입어 하반기 평균 2.9%로 둔화되어 연평균으로는 3.3%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 실업률은 상반기 3.4%, 하반기 3.0%로 연간 3.2%를 기록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2년의 3.1%와 비슷할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1/4분기중 13.2% 상승한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반기 10.8%, 하반기 8.2%, 연평균 9.5%로 2002년 11.3%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경기침체의 깊이를 감안하면 여

전히 높은 수준임.

▣ 시장금리는 3/4분기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지속, 물가상승압력 약화, 풍부한 시중유동성, 국제금리 인하 가능성, 환율절상 압력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4/4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고채수익률은 3/4분기 4.1%로 낮아진 후 4/4분기에는 4.4%로 상승할 전망이다.

▣ 2003년 하반기 경상수지는 23.8억 달러 흑자, 상품수지는 6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주요 품목들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상품수지는 상반기에 이어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 약화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3년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흑자폭이 34.7억 달러 축소된 2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3년 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기조와 수역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 원화 강세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기조를 유지하면서 평균 1,16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3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1,180~1,190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 2003년 하반기 當面課題 및 對應方向

▣ 현 경기침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경제

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으로 판단

- 최근까지도 총투자율은 투자수익률을 밑돌고 있어 투자확대여력이 상당 폭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최근 기업들의 현금자산 보유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금리도 사상 최저수준까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

▣ 정부는 상반기중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콜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동시에 추경편성 방침도 확정하는 등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경기회복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막대한 현금자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금리인하나 재정팽창과 같은 총량적 부양정책은 경기호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
- 따라서 경기부양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

▣ 따라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추경확대, 또는 세율인하 등 총량적인 부양수단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기 확정된 경기부양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가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은, 역설적으로, 거시경제 대책이 아닌 미시경제적 대책, 예를 들어 노사관계정립, 기업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 경쟁촉진 등일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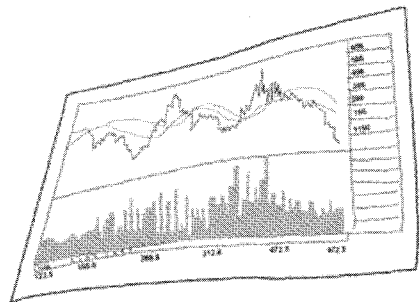
- 일단 확정된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되, 추경확대 여부는 경기상황과 중장기적 재정부담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

-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성 여부,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특히 상반기중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

▣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분명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총량적 부양책보다 오히려 경기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정책적 불확실성의 해소는 하반기중 완만한 경기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임에 유념
- 산적한 현안들은 경제원리에 따라 엄격히, 일관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며, 경제 분위기도 일신할 수 있을 것 ☺



200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¹⁾

(단위 : %, 억 달러)

	2002 ²⁾	2003						연간
		상반기			하반기			
		1/4	2/4		3/4	4/4		
GDP 성장률	6.3	3.7	2.1	2.9	3.1	4.5	3.8	3.4
최종소비지출	6.2	1.2	0.4	0.8	2.0	4.2	3.1	2.0
(민간)	(6.8)	(0.9)	(-0.2)	(0.4)	(1.7)	(4.4)	(3.1)	(1.7)
총고정자본형성	4.8	4.8	2.4	3.6	4.6	4.7	4.7	4.1
(건설)	(3.3)	(8.1)	(4.2)	(6.2)	(5.5)	(2.9)	(4.2)	(5.2)
(설비)	(6.8)	(1.6)	(0.2)	(0.9)	(6.2)	(7.4)	(6.8)	(3.9)
총수출	14.9	17.3	11.7	14.5	6.5	4.7	5.6	10.1
총수입	16.4	18.0	9.6	13.8	4.7	6.3	5.5	9.7
경상수지	60.9	-17.2	19.6	2.4	16.5	7.3	23.8	26.2
상품수지	141.8	12.3	54.1	66.4	40.1	26.6	66.7	133.1
수출	1,625.5	445.0	468.0	913.0	455.2	473.7	928.9	1,841.9
수입	1,483.7	432.7	431.9	846.6	415.1	447.1	862.2	1,708.8
서비스 수지	-74.6	-25.7	-20.4	-46.1	-26.1	-20.3	-46.4	-92.5
소득수지	4.5	3.1	-9.0	-5.9	2.0	-4.6	-2.6	-8.5
경상이전수지	-10.8	-6.8	-5.1	-11.9	0.5	5.6	6.1	-5.8
수출(f.o.b) ³⁾	1,624.7	430.6	462.4	893.1	447.6	482.5	930.1	1,823.2
(%, yoy)	(8.0)	(20.8)	(14.9)	(17.7)	(8.5)	(6.5)	(7.4)	(12.2)
수입(c.i.f) ³⁾	1,521.3	442.2	417.1	859.2	420.3	456.5	876.8	1,736.0
(%, yoy)	(7.8)	(30.9)	(12.1)	(21.0)	(8.1)	(8.0)	(8.0)	(14.1)
무역수지 ³⁾	103.4	-11.5	45.4	33.9	27.3	26.0	53.3	87.2
소비자물가 ⁴⁾ (%, yoy)	2.7	4.1	3.4	3.8	3.0	2.9	3.0	3.3
원/달러 환율(원) ⁴⁾	1,250	1,202	1,209	1,206	1,170	1,151	1,160	1,183
국고채수익률 ⁴⁾	5.8	4.8	4.3	4.6	4.1	4.4	4.3	4.4
실업률 ⁵⁾	3.1	3.6	3.2	3.4	3.0	3.1	3.0	3.2

주 : 1) 국민계정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국제수지부문은 억 달러, KIF 전망치임.

2) 한은 잠정치

3) 2003년 1/4분기까지 잠정치

4) 2003년 2/4분기까지 실적치, 분기평균(소비자물가 제외)

5) 2003년 1/4분기까지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